

## 출산율 1위 전남, 지역성장 반등의 길 열다

### 합계출산율 1.30명 전국 최고...출생아·혼인 건수도 동반 증가 출생기본소득·공공산후조리원·만원주택...생애주기 맞춤 지원 전남형 출산정책, 국가균형발전·저출생 해법...전국 확산 기대

전국적으로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의 위기가 가득한 시대에 전남도의 출생률 반등 흐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1.10에 이어 올해 1분기에 1.30명까지 상승하는 등 전남의 반등세는 독보적으로 전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 도출에는 출산에서 육아까지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인구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반등을 통한 인구유입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남도의 정책적 노력을 살펴봤다.

#### △출산율 등 인구 동향

전남도의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3명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2023년부터 4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 자리를 지켰다. 특히 2위인 세종시(1.22명)와의 격차는 0.08명으로 확대됐다. 2025년 전남(1.10)과 세종(1.06)명의 격차가 0.04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벌어진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7년 1.32명 이후 9년 만에 1.30명을 회복했다. 전국적으로 올해 1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95명으로 2018년 0.97명 이후 8년 만인 점을 감안하면 전남의 출생률 증가 추세는 전국적 흐름을 앞서서 이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공동 1위를 해오던 세종시(1.22명)와의 격차는 0.08명으로 확대됐다. 2025년 전남(1.10)과 세종(1.06)명의 격차가 0.04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벌어진 것이다.

합계출산율 뿐만 아니라 출생아 수도 긍정적이다. 올해 1분기 2569명으로 전년 동기(2228명)보다 341명(15.3%) 증가했다.

혼인 건수도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전남의 누적 혼인 건수는 2,048건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고, 전국적 혼인 건수는 6만2309건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했다. 3월까지 전남 출생아 수는 2569명으로, 전년 대비 341명(15.3%) 증가했고, 전국 출생아 수는 7만5013명으로, 전년 대비 9651명(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인 예요보 세대가 30대에 진입하면서 결혼 증가와 함께 출산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데에는 지자체 차원의 차별

한 정책적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전남도는 그동안 혁신적이고 과감한 맞춤형 임신·출산·양육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해 왔다.

대표적으로 전남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소득을 들 수 있다. 출생기본소득은 2024년 생부터 이후 태어나는 전남 출생아에게 장기 지원하는 사회보장성 급여로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출생율이 높은 선진국의 아동수당 제도와 닮아 있다.

출생기본소득 제도의 탄생 배경에는 출산장려금과 같은 일회성 또는 단기 지원만으로는 심각한 저출산 분위기를 전환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18세까지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지급돼 양육비 부담이 커지는 청소년기까지 실질적

인도움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전환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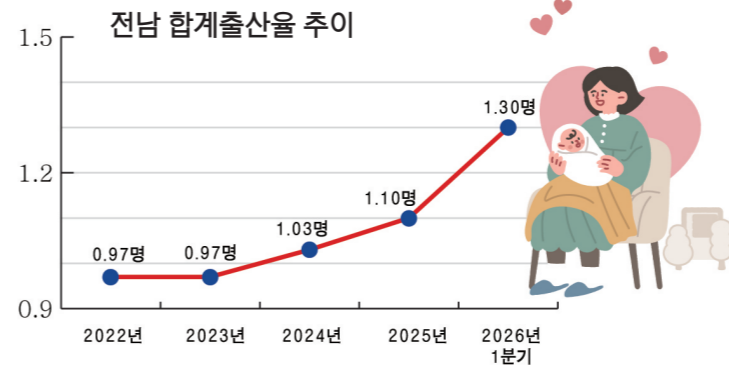
출생기본소득제도도 새정부의 기본사회비전 실현과 맥락을 함께한다.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전남에서 태어난 도민의 기본적인 삶, 소득 보장을 위해 재산·소득·노동활동에 관계없이(무조건적) 지난 2024년 이후 전남에서 태어난 모든 도민(보편성, 개별성)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정기적) 20만원(현금성)을 지급하고 있어 기본소득의 5대 조건에 부합하기도 해서 생애주기별 기본소득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출산·양육 부담 완화  
전남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임신 전 단계부터 출산·양육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불안감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신 전, 초기에는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이 비용 문제로 포기하지 않도록 필수 제한없는 전남형 난임 시술비 지원을 과감하게 도입했다. 가임기 부부 가임력 검사 확대와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신체적·심리적 케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등 가임력 보존과 촘촘한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하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8호점 개원식



#### △전남형 출산지원정책의 국가사업화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과 국가균형발전의 부재로 일자리, 주거 등 출산·양육 환경이 악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역균형발전이나 지방소멸방지는 단순한 시혜나 배려가 아닌 이젠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장기적인 지속 성장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실질적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함께 출생기본소득,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혁신적 출산정책의 국가사업화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전국적 차원에서 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불안한 임신·출산·양육 환경을 그대로 두고 젊은층에게 아이를 낳으라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출생아도 보호자 현장 감담회에서 한 도민은 "출생기본소득이 1세부터 18세까지 지급돼 든든하며 변동없이 사업이 지속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인민국장은 "합계출산율 1위는 도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다"며 "앞으로도 임신부터 양육까지 촘촘하게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고 있다. 출산 직후에는 산후조리를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인 7개소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해 보편적 산후조리 돌봄 모델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추가 개소뿐 아니라 시설개선도 추진한다. 개원된지 오래된 해남, 완도, 강진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이용환경을 더욱 향상시킬 방침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주 기준 160만원으로 민간조리원의 약 60% 수준에 불과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다.

아울러 소득 기준을 전면 철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가가호호 가사·육아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다. 국가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까

지도 지원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지난해 5559명의 산모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1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인 전남형 만원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이 결혼을 결심하거나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전남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입한 시책들은 선진국의 우수정책,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두루 청취해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한다는 원칙 아래 발굴된 것이다. 2026년 1분기 합계출산율 1.30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역과 함께 미래를 살고자 하는 도민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확실한 증표로 볼 수 있다.

## 지붕없는 미술관 고흥

